



유로존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대

이정환 선임연구원

■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 강등 경고가 계속되면서 유럽은 2012년 1월 중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임.

- 로이터 통신은 S&P가 2012년 1월 중 국가 신용등급평가를 발표하겠다는 사실을 유로존 국가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12월 24일 보도함.
 - 이는 12월 6일 S&P가 다수의 유로존 국가들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린 데 따른 후속 조치임.
 - 12월 6일 당시 S&P는 12월 9일 진행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도출되지 않으면 대규모 등급 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 만약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 된다면 그나마 최근 들어 감내능력이 생긴 듯 보이는 유럽 재정 위기가 다시 악화될 것으로 보임.
 - 프랑스, 독일 등 그동안 유로존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국가들 역시 국채 발행에 난항을 겪게 되거나, 발행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방법 도출이 계속 제자리걸음하면서 금융시장의 긴장도는 여전한 상황임.

■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 은행들은 벌써부터 유로화 폐지까지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 나타남.

- Wall Street Journal은 유럽 대형 은행 중 최소 2곳이 유로존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그리스(드라크마), 포르투갈(에스쿠도), 이탈리아(리라)의 옛 통화를 이용해 거래할 수 있는 비상용 백업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12월 27일 보도함.
- 이에 따르면 일부 은행의 기술 담당자들은 금융거래 네트워크 전문업체인 스위프트에 과거 유럽 통화를 이용하여 거래 가능한 시스템 지원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이는 유럽 은행권 역시 유로화 붕괴라는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확인된 것임.

■ 또한, 영국 정부는 유로존 붕괴를 발생 가능한 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비상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텔레그래프는 12월 26일 영국 재무부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경제, 국방, 외교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비상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함.
- 유로존 붕괴 시 영국 정부는 가장 먼저 자본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영국 정부는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유로화 사용을 포기한다면,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투자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영국으로 쏠릴 것을 우려함.
 - 이럴 경우 영국 파운드 가격이 급상승해 수출입 균형을 맞추려는 영국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음.

(Reuters 12/24, Telegraph 12/26, Wall Street Journal 12/27)